



시론

민주주의의 슬픔 박주원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시론

민주주의의 슬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박주원 _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과두제적 정치 그리고 자유, 경쟁, 권리, 개인주의의 확산과 탈정치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위기’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유행이 떠돌고 있다. 1970년대 반독재 투쟁과 1980년의 변혁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권력 획득과 정권 교체를 위한 정당 간의 경쟁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사라져버렸다.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가 회자되는 까닭 또한 이러한 맥락에 기초해 있다. 민주주의를 소위 ‘좋은 민주주의’와 ‘나쁜 민주주의’로 나누고 경쟁하는 서로를 후자라 비난하며 현재의 위기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 이 글은 자유로운 시론 형식의 글로서, 논증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와 달리 논지에 주목할 수 있도록 각주를 없애고 본문 주의 인용도 최소화하였다.

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대중영합주의라는 부정적 의미로서 포퓰리즘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포퓰리즘을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활용하고, 민주주의가 앞선 민주화운동 세대 혹은 세력의 또 다른 권력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1970년대 1980년대 민주주의운동은 자신을 찬미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시선 속에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 랑시에르(J. Rancière)의 말처럼, 민주주의란 통치 형태의 일종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할 행동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자 그러한 잠재성을 향한 끊임없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어떤 고정된 정치적 형식이나 특정 정치권력과 동일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호명은 스스로 경계를 되문고 성찰하며 비판적으로 깨트려 가는 운동이 되지 못한 채 기성의 정치적 틀 안에서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권 교체의 정치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들이 민주주의의 문제를 세대 담론으로 탈정치화하는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선 세대의 민주주의가 현재의 ‘꼰대’ 권력이 되어 오늘날의 청년 세대에게 걸림돌이자 억압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일까? 과연 우리 사회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이 세대의 문제이며, 그리하여 기성세대 혹은 기성 민주주의 운동 세력과 결별하고 부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

오래 전, 혁명과 사회변혁의 많은 의제와 투쟁이 전개되던 시기에 맬스(T. R. Malthus)는 『인구론』(1798)에서 빈곤의 원인을 식량의 양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구의 과잉에서 찾은 바 있다. 이러한 진단이 가지는 함축은 무섭도록 분명했다. 당대 현실에 떠오른 부와 가난의 문제는 인구의 증가라는 자연법칙으로 인한 것이니 -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회 개혁의 해법으로는 -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 사회가 처한 불행한 현실의 원인을 앞선 기성세대의 문제나 혹은 앞선 민주화운동 세력의 권력화에서 찾는 진단의 귀결과 효과 또한 그와 같다. 결코 한 방향이나 경험이 아니었던 우리 역사 속의 민주주의 운동들을 하나로 일반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운동의 경험 전체와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게 만들며, 문제의 원인을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현실의 불행을 낳는 우리 사회의 구조들, 즉 사회의 불평등과 왜곡된 정치 체계를 은폐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대 갈등’ 혹은 ‘세대 차이’라는 담론은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데에 그 정치성이 있다. 그 자체로는 참도 거짓도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체계와 맥락 안에서는 결코 부당성을 찾을 수 없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세대’ 담론은 일종의 시뮬라크룸(Simulacrum)이다. 또한 모든 새로운 것은 낡은 것이 되고 끊임없이 다른 새로운 것에 의해 사라진다는 순환론적 관점은 역사의 변화를 자연의 순환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봄으로써 인간적 노력으로는 변경시킬 수 없는 필연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린다. 더욱이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아파트 10채를 가진 청년이나 평생 노동하며 살다 늙어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노인의 존재를 어떻

게 청년과 기성세대의 대립구도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한 민주화운동 세대가 또 다른 ‘특권’ 세력이 되었다는 담론에는, 지금 통용되는 정치적 형식, 질서, 기준, 척도, 법을 ‘자유로운 경쟁’하에 ‘공정’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그래서 획득된 권력은 별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함축되어 있다. 현재의 법과 척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치체제와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권력과 정치질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질문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력, 현재의 선거 규칙 속에서 이미 경쟁력이 입증된 자의 경쟁, 그리고 편법이나 위법만 아니라면 사회에서 얻게 된 모든 자본 권력과 정치권력은 - 규칙을 공정하게 지켰고 경쟁에서 이길 만한 실력을 가졌으니 - 정당한 것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는 의미를 잃어버린 ‘민주주의’ 대신, 슬그머니 혹은 노골적으로 경쟁력, 실력주의, 공정, 유연성이라는 또 다른 잣대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출생률 저하와 자살률의 증가가 말해주듯 더 이상 삶을 재생산하기 힘든 사람들의 절망을 ‘각자도생’하며 ‘소확행’을 추구하는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다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 담론과 ‘포퓰리즘’ 담론은 이어져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오늘날 왜 증오의 대상인가? 이와 관련하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¹⁾에서 프랑스 혁명 이래 민주

1) 자크 랑시에르, 201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허경 옮김. 인간사랑. 이하는 본문 주로 표기.

주의에 대한 많은 우려와 증오가 있어 왔지만,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 현상들은 동일한 병적 증세를 보여주며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자본과 국가의 과도적 지배가 민주주의라는 호명을 대중적 개인들의 무제한적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 형태의 의미로 축소시킨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민주주의, 즉 인민의 권력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의 권력을 뜻하는 것도 다수의 권력도 노동계급의 권력도 아니다. 그것은 통치 받을 자격만큼이나 통치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고유한 권력이기에(Rancière 2011, 106), 민주주의의 통치가 정치성을 갖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통치할 자격의 부재, 즉 ‘아무나’의 통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유리한 출생 성분이나 재산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아무나의 통치’에 반감과 증오를 가졌던 것은 예정된 것이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렇듯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는 매우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뿌리 깊은 것이지만, 오늘날의 증오는 이 개념에 침투되어 있는 혼란 양상에서 기인한다. 더 이상 군주제도 신분제도 아닌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신성 목자와 양떼의 구분이 사라지고 통치의 자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합의한 오늘날의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하나의 ‘이념 장치’로 만들어 또 다른 배제와 경계의 자격 조건을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랑시에르는 자본과 지식 간의 과도적 동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목표는 바로 정치적인 문제들을 탈정치화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 장치인 ‘대의제’라는 평화적 통치는 민주주의적 열정을 사적인 쾌락으로 전환시키며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선에 대하여 무

관심하게 만들고 있으며, 개인의 욕구 실현이라는 쾌락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소비자에 불과한 ‘민주적인 개인들’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민(民)의 이름으로 과두정치가 난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통치 형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Rancière 2011, 156~195)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만연된 ‘소비적 민주주의 사회’는 과두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 귀결이다. 그럼에도 ‘소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잃어버린 신성 목자의 재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포퓰리즘 논의가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민중적 정당성’과 ‘과두제적 정당성’ 사이의 악화된 모순을 은폐시킬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용어이다 (Rancière 2011, 167). 포퓰리즘은 과두제적 지배가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정당성으로 사용되는 한편, 그러므로 소수 엘리트의 과두제적 지배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포퓰리즘은 과두제에 대한 거대한 염원을 숨기면서도 동시에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동일한 본질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뜻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은 이 용어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최근 회자되는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마치 과잉 정치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탈정치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탈정치화된 개인들이 사적 영역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 단지 권리들 간의 경쟁이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으로 정의되어 버린다면, 그 귀결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듯하다. 그 경쟁에서는 이미 권력을 가진 자의 권력,

이미 권리를 가진 자의 권리만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의 이름으로’ 과두정치가 난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통치 형태가 되었으며 권력의 경쟁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2. 촛불 국면의 주체, 담론, 이데올로기: 자유다원주의와 사회 개혁 사이에서

지난 2016/2017년 우리 사회를 통과했던 촛불 국면에서 많은 이들은 그 운동이 87년 항쟁의 귀결처럼 지체된 민주주의나 사회변혁 없는 정치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변혁으로 나아갈 것을 소망했지만, 촛불 이후 전개된 사회정치적 국면은 촛불항쟁에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계급동맹 혹은 불안정한 연합이 해체되고 자본과 국가의 과두적 지배가 오히려 강화된 양상이 되었다.

왜 이러한 귀결이 초래된 것일까? 가장 쉽게는 촛불 국면을 통해 새로 구성된 정부가 그 국면에서 재현된 상이한 이념 지형들을 개혁적인 블록이나 연합으로 구축해 내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찌면 우리 사회 안에 분화되어 있는 상이한 이념과 세력들을 묶어내려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정부와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방향은 상이한 이념적 지형들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불화의 지점에 주목하기 보다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촛불 국면에서 재현된 한국 사

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돌아보며 민주주의의 조건 혹은 그 불가능성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16/2017년 촛불 국면에 호명된 상이한 주체의 층위들, 상이한 담론과 이데올로기들을 통해 촛불 이후 연대될 수 없었던 차이와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그 속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국면을 바라보고자 한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전개된 촛불 국면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운동 부문, 그리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 민중진보진영 운동에서 바라보았던 항쟁의 성격과 주체의 호명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주체와 동력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강조점을 드러내준다. 먼저, 촛불항쟁의 시작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운동에서는 ‘이게 나라야?’라는 촛불 국면의 키워드를 세월호 사태 이후 갖게 된 분노와 물음에서 촉발된 것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2008년 이래 계속되어 온 다양한 시민운동들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파동에서부터 2013년 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를 거치며 전개된 자발적이고도 산발적이었던 시위의 특성이 촛불 항쟁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²⁾

이와 달리,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 민중진보진영 운동에서 바라보는

2)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2018/5/18. “시론: 촛불혁명 이후의 사회운동.” 촛불항쟁 1주년 기념 민교협 학술심포지움 발표문.

촛불항쟁의 시작은 2015년 11월 15일 노동자·농민·빈민들의 민중총궐기 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했던 백남기 농민이 몰대포에 쓰러진 이후 2016년 9월 25일 사망하고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과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검영장 만료일인 10월 25일까지 병원 장례식장을 한 달 동안 지켜냈던 투쟁본부의 운동이, 최순실의 테블릿PC 보도와 박근혜의 개헌 선언과 긴밀히 관련을 맺으며 10월 29일의 촛불시위로 상승되었다는 것이다.³⁾

무엇을 촛불의 시작이나 계기로 보는가의 문제는 촛불항쟁의 특성과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함축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촛불항쟁의 동력과 의미를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발성과 조직으로 묶어내기 힘든 산발적이고 다양한 운동의 특성에서 찾았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생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조직화된 투쟁과 연대가 촛불시위를 통해 최순실-박근혜 사태를 탄핵 국면으로 이끌어간 주력으로 찾아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2016/2017년의 경험이 ‘촛불시위’, ‘촛불항쟁’, ‘촛불혁명’이라는 각기 다른 개념들로 재현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라던 대로 박근혜 정권의 탄핵과 새로운 정부의 구성을 이루었다고 여기는 관점에서 그것은 ‘촛불혁명’이었으나, 그 국면이 새로운 정부의 구성에 머물지 않고 우리사회 각 부문에 구축된 권위적 메커니즘과 개인의 내

3) 주재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전 퇴진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대책위 정책기획팀장). 2018/5/18. “촛불 항쟁과 민중 총궐기 백남기 농민투쟁,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보민중진영의 과제.” 촛불항쟁 1주년 기념 민교협 학술심포지움 발표문.

면까지 일상화된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그것은 ‘촛불항쟁’이지 아직 혁명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촛불 이후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단지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 인상을 통해 상층노동자를 중간층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빈민과 하층노동자, 특히 농민은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촛불항쟁은 여전히 미완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이한 시선과 담론들 안에는 민주주의의 조건에 대한 논쟁점이 함축되어 있다. 사회변혁의 동력이,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힘이 중간층의 확대에 놓여있는지 아니면 시민과 노동자·농민의 계급 동맹에 놓여있는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전자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후자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더욱 분화되어 있었는데, 전자 안에서도 자유로운 개인들의 참여와 공감을 중시하는 다원적 자유주의의 경향과 공정으로서의 정의나 절차의 공공성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는 공화주의적 경향이 엇보인다. 민중진영 또한 기본적으로는 계급동맹에서 사회변혁의 핵심적 조건을 찾으면서도 그 속에서 정부를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적 경향과 민중민주주의의 경향이 혼재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시민운동 부문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2016/2017년 항쟁은 2008년과 2014년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일까? 또한 2008년 광우병 시위에서 나타난 담론과 이념들이 2014년 세월호 사태로 제기된 문제제기와 연속될 수 있는 동질적인 것이었을까? 촛불 이후 연대회의 측에서는 ‘촛불혁명’의 주체를 -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운동에서 설명해 오던 공민으로

서의 시민과는 결을 달리하는 - '불안정하고 위태롭고 자유로운 다중(multitude), 다시 말해 기존의 계급 범주나 사회적 분류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 자각된 개인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들을 보다 발전된 시민의 양태로 해석함으로써, 조직화되지 않은 이들의 형태를 한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원성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연대의 기반을 '공감'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촛불 국면의 주체로 호명된 '자유로운 개인'이 파편화된 개인주의와 다른 지점이 무엇인지 설명되지 못한다면, 2008년 광우병 시위 이래 출현한 새로운 주체의 호명이 2014년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적폐 청산'을 외치며 결집한 주체와 자연스럽게 연속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공통된 구호 아래 하나가 되었지만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이유로 광장을 즐기는' 이들이 '다시 발견한 민주주의'의 주역이자 '젠더적 감수성 같은 인권 기반 접근'과 '공감'을 통해 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라면, 이들이 어떻게 경쟁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고 '우리'라는 연대의 원칙에 공감하게 되는지 그 근거와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제기되었던 '국정농단 규탄'이나 '하야 촉구'라는 구호와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 또한 단일한 이념의 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농단'에 반대한다는 구호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나 공적 위치에 있지 않았던 최순실에 의해 국가의 통치가 좌우되고 있음을 규탄하는 것이므로, 만일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원칙대로 잘 운용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관점을 함축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적 공적 질서와 원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정 농단'을 규탄하

는 의제는 -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 정당 간의 경쟁과 정권 교체로서의 정치에 국한된 현재의 정치체제와 질서를 수호하는 이념으로 귀결된다. 당시에 문제를 사회 전체에 구조화된 '적폐 청산'으로 보았던 주체들과는 커다란 간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016/2017년 촛불 국면에 나타난 담론과 주체의 호명을 통해 우리는 87년 이후 우리 사회에 두 개로 분화된 이념적 지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정 농단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주체들은 정부를 일관된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체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촛불 이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의제로 이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적폐 청산을 요구했던 주체들은 위계적 권력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관계 자체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방향에 그 목표가 있었다. 자유 다원주의와 사회 개혁 사이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그 사이에서 있다.

물론, 조직화되지 않은 자발적이고 산발적인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호명은 우리 사회에 계급으로 자신을 정체화하지 않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형성했음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그 세력이 곧장 신자유주의적 개인으로 의미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87년 항쟁이 직선제 개헌이라는 정치적 타협으로 종결된 이후, 특히 1993년 문민정부가 등장한 이래 우리 사회에서 정치는 선거와 정당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기 때문에, 촛불 국면에서 주목받은 자유로운 개인들이라는 새로운 주체는 정당이라는 기성 정치 영역 밖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성장해 갈 수 없었다. 더욱이 1997년 IMF 체제 이후 가속화된 자본의 노동유연화 방향 속에서 그 개인들은 간접고용과 불안정노동에 내몰림으로써 더 이상 '자유

로운' 개인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새로운 주체의 특성으로 주목받았던 '자발성'과 '유연성'이라는 성격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유연성 속에서 자발적으로 - 사실은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의해 - 실력을 계발하고 경쟁하는 과편화된 개인으로 귀결되고 말았던 것이다.

비록 민주주의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기존의 정치적·사회적 형식에 대항하여 의제를 제기했던 주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추론될 수 있다. 자유다원주의가 자신의 다원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안정된 것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탈정치화된 사사로운 개인의 불만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공적 공간과 정치적 형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만일 촛불 국면에서 나타났던 '자유로운 개인'들이 그 국면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사회 개혁의 이념과 연합하여 자본의 노동 유연화에 함께 대항하고 정치적 법적 영역에서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규제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일정한 사회적 삶과 위치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로 성장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불안정하게 해체시키는 반노동의 기반인 간접고용과 불안정고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주거권과 생존권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는 자유다원주의와 사회개혁주의가 동맹이나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촛불 국면에 나타났던 불안정한 동맹은 지속되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단지 수권 정당을 향한 경쟁적 정당정치라

는 프레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와 다시 광장에 모인 개인들은 박근혜 지키기와 문재인 지키기 라는 다시금 반복 되는 정치적 파당과 경쟁적 반목으로만 재현되며 민주주의는 정권 교체의 정치로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3. 파편화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 방식과 사회 정치적 분열⁴⁾

경쟁력, 실력주의, 유연성, 공정이라는 환상. 고독, 반목, 불안한 삶과 탈정치화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대 말엽부터 시작된 유연노동의 확대에 따라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알바, 파트타임, 기간제 노동자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불안정한 노동계층이 기존의 조직화된 노동계급으로 묶을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부분으로 떠올랐다. 노동 조건이 불안해지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취약해짐으로써 정체성을 잃고 파편화된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적 실존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존의 노동자 계급이 지속적

4) 이 절의 내용은 다음 세 편의 필자의 글에서 개진된 문제의식과 논지에 근거한 것이다. 재인용한 문장에 대한 표기는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박주원. 2017/6/30. “현대 사회의 불안과 자본주의 통치성: 다르덴 형제의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2014)>을 통하여.” 『정치비평』. 제10권 제1호(복간호); 박주원. 2019/3/31. “자아와 문화의 정체성, 불안과 불만의 문화정치학 - 프로이트(S. Freud) 정신분석학의 정치사상적 접근.”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9집 1호; 박주원. 2021/3/31. “프롤레타리아트에서 프레카리아트로?: 우리 시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현상과인식』. 2021년 봄호, 제45권 1호.

인 노동 보장을 위해 자본과 국가와 수행해 오던 계약관계에서 해체된 사람들은 서로 상이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해를 가진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스스로를 일정한 사회적 관계로 관련 맺을 수 없음으로써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파편화되었다.

이러한 이들에 주목했던 가이 스탠딩(G. Standing)은 『프레카리아트(The Precariat): 새로운 위험한 계급』⁵⁾에서 이들이 스스로를 대자적으로 정체화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그 귀결이 생활양식에 가져오는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먼저, 불안정한 노동조건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서 자부심과 사회적 가치를 찾을 수 없게 되며 일을 통해 신뢰할 만한 관계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창출하는 ‘도덕적 호혜’는 손상되기 쉬운 것이 된다 (Standing 2014, 53-54). 그는 이를 사회적 기억의 감각이 약화되어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기억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재생산되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직업과 신분의 해체 속에 있는 오늘날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감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률을 제공하고 의미와 안정성에 대한 감각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억을 형성시킬 관계와 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력, 실력주의, 유연성 따위에 기반을 둔 생활방식과 그것을 조성하는 시스템’ 속에서 소외와 아노미에 처해 있고 불안하고 분노하게

5) 가이 스탠딩. 2014.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옮김. 박종철출판사. 이하는 본문 주로 표기.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Standing 2014, 58-59). 이러한 생활방식과 감성에 익숙됨으로써 그들은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잃게 될 뿐 아니라 그들 내부의 긴장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며 자신들 공통의 취약성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Standing 2014, 60)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생활양식과 익숙된 감성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자본의 질서와 기성의 권력이 어떻게 자신의 질서와 척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지 잘 보여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 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는데,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와 사업자를 고려하고 향후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임금 체계에 산입함으로써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을 제출한 정부의 논리였다.

이는 노동계와 영세 자영업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까지 어느 정도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실질 임금으로 받고 있었던 차상위 임금노동자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최하위 임금노동자 간에 서로 다른 입장과 균열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또한 이제까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불하고 있었던 대규모 사업주나 중간 규모 사업주로서는 이 개정안으로 지불해야 할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의 부담은 거의 없고 오직 최저 시급과 기본급에 의지해 사업장을 운영해 왔던 영세 사업주에게만 그 인상의 부담이 돌아가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하층계급을 구성하는 영세 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이 최하위 시급 임금 노동자와 상반된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갈등과 논란의 장에서 대규모 기업이나 안정된 규모의 사업장은 자유롭다. 대규모 기업이나 어느 정도의 복리후생과 수당을 지불해 왔던 중간 규모의 사업장은 아무런 피해와 부담도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푼도 인상하지 않고도 임금을 올린 것과 같은 착시 효과를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임금 협상에 유리한 명분만 가져간 셈이다.

즉,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실질 임금 인상이 거의 없다는 데 - 그리하여 의미 있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데 - 있는 것뿐 아니라, 최하위 임금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 인상분을(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산입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차상위 노동자와(최저시급이나 최하위 임금노동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윤을 내기 힘든)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최저 임금 인상을 반대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놓여 있다. 소득 재분배를 다루는 이러한 방식들은 우리 사회가 경계에서 있는 약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며 지배를 재생산하는지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이는 약자들 간의 결속이 끊어지고 서로 반목하며 사회의 비참을 홀로 견뎌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고독한 모습을 드러내준다. 이미 오래 전 부르디외(P. Bourdieu)는 『세계의 비참(La Misère du Monde)』(1993)에서 노동자들에게 누군가를 해고자로 지목하게 하고 그를 해고한 만큼 임금을 더 받는 방식으로 회사가 해고를 수행했던 경험을 회고하는 노동자 미셸 레알루

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동료들에게 지목된 실비아는 끝내 자살을 택했다. 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다르텐 형제(Jean-Pierre & Luc Dardenne)의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Deux jours, une nuit)>(2014)은 자본의 질서가 사람들의 삶에 깃들 때 어떻게 사람의 감정과 육체를 통제하고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지 보여준다.

자본은 노동자들 간의 결속을 해체하고 이들의 욕망과 불안을 통해 지배를 재생산해 내며, 이러한 경쟁과 두려움을 통해 기성의 질서는 유지된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과 동료에 대한 불신에 빠지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자존감은 파괴되고 무기력하게 질서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진다. 현대 사회에서 일상화된 신경증과 불안은 바로 이러한 노동 통제 방식의 결과였던 것이다. 푸코(M. Foucault)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작용하는 이러한 억압과 활용의 기제들을 권력의 메커니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통치가 사람의 생명을 통제하고 훈육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대 권력의 구조를 일컬어 ‘생명정치/삶정치(biopolitique)’⁶⁾라 불렀다.

이렇듯 일종의 환상, 증상, 은유이기도 한 경계는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혹은 위에서 언급했던 최저임금 개정안의 귀결처럼 최하위 임금노동자와 차상위 임금노동자들 간에, 최하위 임금노동자와 영세업자 간에, 그리고 내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간에, 혹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재현되고 이들 사이의 경쟁과 감시, 반목과 욕망으로

6) 미셸 푸코,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 난장.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 직원들을 일정 비율만큼 정규직 화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이 사립학교 재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의 정규직 교사들과 교사 지망생들에 의해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던 사례는 이를 잘 드러내 준다. 인천공항이나 KTX 등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공정한 경쟁의 물’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불평등이 깊고 강하게 자리한 사회에서 ‘공정’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재의 척도와 원칙이 지금의 삶의 비참과 불평등을 만들어낸 것일 때 그 척도와 원칙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공정’이라면, 그것은 지금 권력을 가진 자의 권리, 지금 권리를 가진 자의 권리, 다시 말해 현재의 비참과 불평등의 지속을 의미할 뿐이다.

질서의 생산과 재생산. 아감벤(G. Agamben)이 지적했듯 추방은 단순히 배제의 통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더욱 매달리게 하는 하나의 통치술이다. 비정규직을 비정상적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사람들의 욕망을 정규직 진입으로 향하게 하고 그들 간에 갈등하게 만들며,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불안을 부추김으로써 소위 공정한 질서라 부르는 경쟁의 체제에 편입시키며, 추방된 이들의 시선을 정상이라 불리는 곳을 향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중심의 질서와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평등은 의미 있는 정치적 의제로 나타나지 못한 채 은폐되고 만다. 자신의 실업 상태와 취업난을 자본/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더 낮은 임금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값아 먹는 외국인 노

동자에게 분노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혐오’나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한 기성세대에 대한, 혹은 남성과 여성 서로에 대한 ‘혐오’ 증상은, 자신의 삶이 어떤 사회적 체계와 구조 때문인지 질문하지 못한 채 단지 사적 영역에서 불만과 분노로 부유하는 초상을 드러내준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표상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혹은 영세 자영업자와 최하위 임금노동자 간에,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에, 혹은 — 지금 언론과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여성과 남성 간에 갈등은 문제의 핵심적 장소가 아니다. 지난 4월 ‘청년·학생 시국선언 원탁회의’가 이야기했듯, 비정규직 노동의 불안정성과 불안, 주거와 삶의 열악함을 겪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고 불평등의 문제인 것이다.

4. 반(反)민주주의로서의 민주주의: 정권교체로서의 정치, 파편화된 개인의 권리로서의 민주주의에 반하여, 우리 사회의 과도제적 민주주의에 반하여

이 글은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호명되는지 추적함으로써 권력의 재현과 전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글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증오의 대상이 된 까닭을, 자본과 지식의 과도적 동맹 속에서 수권 정당이 되려는 경쟁이 정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정치의 경계 밖으로 밀려난 대중들은 서로 의미 있는 결속

으로 관계 맺지 못한 채 파편화되어 자신의 삶이 근거하는 사회구조에 선을 돌리지 못하도록 탈정치화된 바에서 찾고자 했다. ‘정권교체의 정치’로서의 민주주의는 동일한 지배층의 재생산을 보장해 주는 과두적 체제일 뿐이며, 자본과 국가는 모두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악화된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의 과두적 독점 동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탈정치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사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의미를 잃어버린 민주주의 대신, 경쟁력, 실력주의, 공정, 유연성이라는 또 다른 잣대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그리하여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나 그 권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의미와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만연하게 된 ‘소비적 민주주의 사회’는 과두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 귀결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마치 우리 사회가 과잉정치가 된 듯 보이게 하지만 사실상은 탈정치화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포퓰리즘은 과두제적 지배가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정당성으로 사용되는 한편, 그러므로 소수 엘리트의 과두제적 지배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은 경쟁, 분노, 혐오, 불안과 같이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작용하는 억압의 프레임들을 오늘날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으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현실에 나타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최하위 임금노동자와 차상위 임금노동자들 간에, 최하위 임금노동자와 영세업자 간에, 내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간에, 혹은 남성과 여성 간에 반목하고 혐오하는 불행한 현상은 경계에서 밀려난

이들을 서로 반목하게 하고 끝없는 경쟁 속에 갇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욕망과 불안을 통해 지배를 유지하고 재생산해 내는 자본의 통치성의 효과이자 귀결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원인을 앞선 기성세대의 문제나 혹은 앞선 민주화운동 세력의 권력화에서 찾고 있는 최근의 ‘세대 담론’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코 한 방향이나 경험이 아니었던 우리 역사 속의 민주주의 운동들을 하나로 일반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운동의 경험 전체와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게 만들며, 문제의 원인을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현실의 불행을 낳는 우리 사회의 구조들, 즉 사회의 불평등과 왜곡된 정치체계를 은폐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대한 애도와 슬픔은 그것이 위기에 빠졌거나 스스로를 조롱하고 증오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을 증오하고 거부해야 하는지 비판의 방향을 잃은 채 자신보다 더 약한 이로 향하는 불만과 분노로밖에는 우리 사회의 위기와 불행을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독한 초상에 놓여 있다.

만일 민주주의가 통치 형태의 일종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할 행동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자 그러한 잠재성을 향한 끊임없는 과정이라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일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규정해 놓은 프레임과 형식, 척도, 경계를 증오하고 거부하며 넘어서고자 하는 ‘반(反)민주주의’로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 속에 놓여 있다.

탈정치가 아닌 반(反)정치로서의 민주주의, 그것은 정권 교체를 위한 경쟁과 반목으로 전락한 현재의 민주주의의 틀에서 얼마나 벗어나 정치의 외부에서 '정치'의 경계를 변경하고 넓혀가는가에 달려 있다. 수권 정당을 선택하는 정권 교체의 정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이 속한 사회의 구조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적 통로와 형식의 경계를 넓혀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개인의 이익과 권리로서의 민주주의에 반하여 권력의 독점과 사회의 불평등을 의제화하는 데로 초점을 가져가야 한다. 민주주의란 자신의 문제를 이익의 문제나 권리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 문제로, 공동의 삶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역량에 다름 아닌 것이다. ~~다~~